

실업자직업훈련 지원 줄어 학원계 비상

훈련기관 승인 취소로 일부 학원 운영난 예상돼

■ 취재 / 강인옥 inok@mbakery.co.kr



이 안배에, 현재 한정된 목표 인원과 예산액에 맞춰 훈련기관을 선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노동사무소는 훈련인원과 예산은 한정돼 있으나 교육을 희망하는 곳이 많아 훈련직종 및 기관 선정시 취업률, 자격취득률, 훈련생 및 산업체의 만족도 등 질적 요소를 위주로 승인 기준을 강화했다. 아울러 훈련성과에 따라 훈련비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같은 실업자직업훈련 내실화 방침은 올들어 제과학원들의 훈련기관 승인 취소로 이어져 그동안 실업자재취업훈련, 고용촉진훈련 등에 큰 비중을 두고 운영해오던 제과학원계에 비상이 걸렸다.

기업의 연쇄부도와 정리해고로 대량실업 사태를 빚었던 IMF 체제하에 실업난 극복을 위해 확대 실시됐던 정부의 실업자직업 훈련 지원이 줄어들어 크게 축소됐다. 이는 국내 경기 회복을 타고 실업률이 98년 연평균 6.8%, 99년 6.3%에서 2000년 6월 현재 3.8%로 감소했기 때문에 실업률에 따라 조정, 운영되던 실업자직업훈련에 대한 정부의 예산도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99년 2월 실업률이 8%를 기록했던 것을 감안하면 현재의 실업자수는 대략 반 정도 감소한 상태로 정부의 실업자 직업 훈련 인원도 99년 총 35만 8,000명에서 올해 전년대비 60%로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타당성만 있으면 일정 조건을 갖춘 학원들에게 별 무리없이 훈련기관 승인을 내주던 지방노동사무소도 지역 자체의 특성이나 전년도 실적, 지역별 실업자 비율에 따라 예산

제과학원들 잇달아 훈련기관 승인 보류돼

98년 3, 4월부터 고용촉진훈련, 실업자재취업훈련을 실시해 오던 서울 지역 일부 제과학원들은 올초까지만 해도 실업자직업 훈련과정 4~5개 반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지난 6월 기존 훈련과정 수료 후 다음 과정을 실시하기 위해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신청했지만 예산 부족의 이유로 승인받지 못했다.

서울의 A 제과학원의 경우 6월 9일 끝난 실업자재취업훈련 과정에 이어 다시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서류를 제출했으나 예산 부족의 이유로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후에는 훈련기관의 우선 선정 조건인 맞춤형훈련과정으로 서류를 구비, 재신청했지만 이 또한 지방사무소의 배정된 예산 부족으로 보류된 상태이다.

작년 실업자재취업훈련 2개반과 고용촉진훈련 2개반을 운영했던 B 제과학원도 올해초 시작된 훈련과정 수료 후 6월부터 다시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지방사무소에 신청했으나 역시 승인을 받지 못하고 현재는 실업자재취업, 고용촉진 각 1개반씩만 운영 중이다.

그동안 고용촉진훈련과정만 실시해 오던 C 제과학원도 설립한지 3년 이상된 교육기관에게 지정하던 실업자재취직훈련과정을 올 3월 신청했으나,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서 예산 부족으로 승인해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또한 지금까지 운영해오던 고용촉진훈련과정도 5월말 수료 이후, 다음 기수 모집을 하지 못한 상태이다. 실업자수 감소에 따라 실업자수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어 훈련실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 수가 감소하는 것도 문제지만 승인 받은 경우라도 교육 희망자가 많지 않아 모집저조로 정규반 구성이 어려운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3월에 시작해 8월말 끝나는 고용촉진반도 훈련인원을 30명으로 승인받았으나 신청자들이 적어 현재 15명만으로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미 2~3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제과제빵 무료교육을 받았을 뿐 아니라 수료 후에도 열악한 작업환경의 제과점에서 일하는 것을 기피해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아 취업률이 높은 정보통신이나 사무관리, 기타 계열 등 실업자들이 선호하는 직종으로 무료교육신청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학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같은 실업자직업훈련실시 승인 취소 현상은 직업전문학교나 지방 사설학원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앞으로 정부의 실업자직업훈련지원이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상돼 IMF 이후 2~3년간 이들 교육에 큰 비중을 두어온 일부 제과학원들의 운영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 훈련인원 12만 3천명, 맞춤형훈련 우선 실시

정부는 실업자재취업훈련과 관련해 훈련인원을 99년 22만 6,000명에서 올해 12만 3,000명으로 50% 줄여 책정하고, 6월부터 매달 전국 7,000명 정도가 무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훈련지원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훈련의 부실화 방지 및 훈련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을 강화했다.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 김민정 팀장은 "앞으로 지방노동사무소들은 실업자들이 선호하는 미래유망직종에 중점을 두어 실시능력이 뛰어난 교육기관을 선택하고, 맞춤형훈련실시 교육기관을 우선 승인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취업률이 높고 중도 탈락률이 낮은 훈련기관과 실업자직

■ 「맞춤훈련」 시행지침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

● 훈련대상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되어 있는 실업자

● 훈련시간

60시간 이상 1년 이내가 원칙.

단 기업에서 훈련생을 직접 선발, 자체 훈련시 60시간 미만 편성 가능.

● 훈련생 모집

최소 승인인원 10명.

약정체결기업의 인사담당자가 동意的한 자에 한하여 위탁훈련 인정.

● 훈련 약정체결과 훈련과정 편성

- 현장 중심 훈련실시를 위해 약정체결기업에서의 현장훈련이 총 훈련 시간의 10~20% 편성되도록 의무화.

- 약정체결 대상기업이 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 사업 또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 한하여 약정체결 가능.

● 훈련비 지원 : 취업률에 따른 지원 방식

- 취업률 60% 미만 : 표준 훈련비의 90%

- 취업률 60~80% 이내 : 표준 훈련비의 110%

- 취업률 80% 이상 : 표준 훈련비의 120%

* 현장 훈련비는 1일 4시간 한도 내에서 표준 훈련비의 60%를 약정 체결 기업에 지급

● 훈련승인의 제한

- 취업률이 50% 이하인 경우 취업률산정시점부터 6개월 동안 맞춤형훈련을 승인하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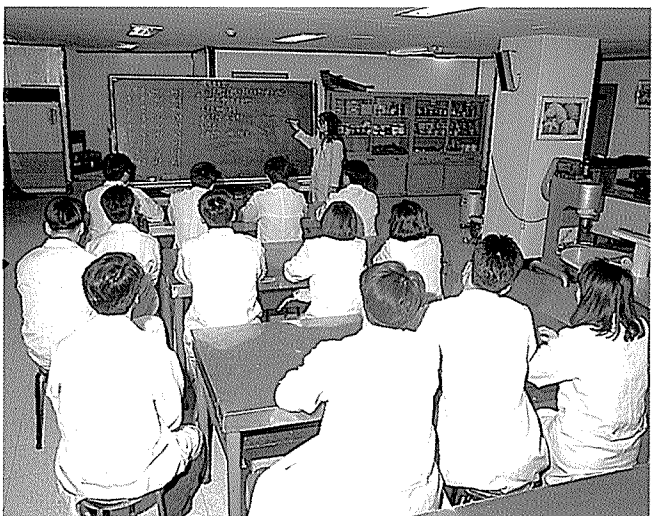
- 하나의 기관이 동시에 3개 이상 맞춤형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없음.

● 우수 맞춤형훈련기관에 대한 지원

- 취업률이 60% 이상인 훈련직종은 타 실업자직업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우선 승인.

- 당해 연도 맞춤형훈련 실시인원이 전체 실업자직업훈련

실시 인원의 30%이면서 평균 취업률이 70% 이상인 훈련기관은 모범훈련기관 포상시 우대



업훈련기관 및 과정평가 결과 우수과정으로 선정된 훈련기관을 통해 직업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업자직업훈련시 우선 선정되는 맞춤형훈련은 훈련기관과 기업간에 훈련직종, 수준, 방법 및 훈련 수료 후 취업 등의 사항에 관한 훈련약정을 체결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기업이 수료생을 우선 채용하는 실업자직업훈련의 한 방법이다. 이 훈련은 실업자 재취업훈련, 고용촉진훈련 등 정부지원 무료교육을 받은 인원이 98년 36만 3,000명, 99년 35만 8,000명에 이른 것에 비해 취업률은 각각 19.8%, 30.6%에 그치자 이의 개선을 위해 99년 3월부터 시행됐다. 맞춤형훈련을 받은 교육생의 작년 취업률은 57.1%로 일반훈련 방식의 30.6%보다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4월부터 시행지침을 강화하여 진행 중이며 이 훈련과정을 신청한 교육기관에 우선 승인하기로 했다.

이밖에 훈련의 내실화를 위해 정부는 훈련기간을 단축해 4개월 이하 과정을 원칙(단, 맞춤형훈련은 훈련과정의 특성을 고려해 6개월까지 승인가능)으로 정했고, 훈련생의 무료교육 지원시 소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고용정책실 인적자원개발과 정원호 사무관은 "실업자 재취업훈련이 주부들의 취미생활로 이용돼 취업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은 부실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는 고용센터에서 직업훈련 신청자를 대상으로 취업과 연계된 상담을 하고 그 가능성의 여부를 가려 소견서를 발급, 훈련기관 등록시 제출하는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실업률에 따라 실업자직업훈련 정책을 조정하면서 훈련의 부실운영 방지와 내실화를 위해 훈련비나 수당 등을 보다 현실화하고 취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만들어 교과내용과 운영능력 등을 평가해 훈련기관을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에는 운영난 더욱 심각해질 듯

정부의 실업자직업훈련 지원이 축소되면서 그동안 여기에 많은 비중을 두고 운영해 오던 제과학원들은 앞으로 심각한 운영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맞춤형훈련시행지침 강화와 훈련기관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훈련실시를 승인받기가 어려워질 뿐 아니라 훈련생 모집률도 더욱 저조해 질 것으로 보인다. 올 3월경 시작된 6개월 훈련과정이 끝나는 하반기부터는 학원들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학원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또한 대부분 학원들의 유료 수강자들도 실직자 무료 교육과정과 학원수의 급증으로 작년 대비 50%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제과학원들의 운영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100여개에 이를 만큼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난 제과학원들도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학원 관계자들은 향후 1~2년간은 포화상태의 학원계가 조정기를 거칠 것이라는 데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과학원은 전문제과기술학원으로서 우수한 강사진을 보유하고 기술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한편, 관련업체와의 위탁훈련 연계 등 수요창출을 위한 자구책 마련이 시급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인**